

정보인권연구소 시민사회 활동가 연속강좌 제2강

AI 빅테크의 전쟁 운영체제와 평화운동

네 개의 사진에서 세 개의 문턱까지

강성현

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 · 평화월딩연구소 소장

주관 정보인권연구소

후원 하인리히뵐재단

2026년 9월 8일(화) 19:00 · 온라인

오늘의 순서

네 개의 사진에서 출발해 세 개의 문턱으로 간다

- | | | |
|---|-------------------|---------------------------|
| 1 | 네 개의 사진 | 키이우 · 자포리자 · 미나브 · 그리고 이곳 |
| 2 | 빅테크는 어떻게 전쟁에 들어갔나 | 메이븐에서 신군산복합체까지 |
| 3 | 도구가 아니라 운영체제다 | 온톨로지 · OODA · 분류기의 역설 |
| 4 | 전장에서 행정으로 | 가자에서 이민세관집행국까지 |
| 5 | 한반도, 두 개의 문턱 | 국방AI법안과 76년의 분류 권력 |
| 6 | 평화운동은 무엇을 할 수 있나 | 입력 · 결정 · 속도 |

2026년 8월 24일, 키이우

독립 35주년 기념 열병식. 육해공 무인 전투 체계만으로 구성. 세계 최초



무인 군용차량 수집 대 · 흐레샤티크 거리

병사가 없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공개 영상(2026.8.24) · MBC 뉴스

AI 빅테크의 전쟁 운영체제와 평화운동 · 정보인권연구소 시민사회 활동가 연속강좌 2강



무인 수상정 마구라 · 드니프로강

2026년 7월 6일, 자포리자

주유소 프로판가스 탱크 타격. 민간인 3명 사망



우크라이나가 확보한 러시아제 드론 잔해

지상과 교신할 안테나

없음

탑재 컴퓨터

엔비디아 젯슨 오린

칩 분석 결과

지형 이미지 저장 · 프로판 탱크 등 특정 시설을 알아보
도록 사전 학습

운용 기간

2026년 5월 ~ 7월

스스로 표적을 정하는 인공지능을 실은 드론으로
민간인이 사망한 첫 기록 사례

New York Times(2026.8.24) · 연합뉴스(2026.8.25) · CSIS 와드와니 AI센터 평가

AI 빅테크의 전쟁 운영체제와 평화운동 · 정보인권연구소 시민사회 활동가 연속강좌 2강

사람이 정한 세 가지, 기계가 한 몇 초

판단 과정에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사람의 결정은 있었다

① 좌표

사람이 결정

미리 정해진 대략적
좌표까지 비행

② 표적 범주

사람이 결정

프로판 탱크를
표적에 포함

③ 학습 데이터

사람이 결정

그 범주를 학습시켜
기체에 탑재

④ 최종 표적 선정

기계가 결정

근접 후 몇 초
표적 선택과 충돌

기계가 알아서 한 시간은 마지막 몇 초뿐이다

그 몇 초를 규제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논의였다면, 규제해야 할 것은 그 이전의 몇 달이다

2026년 2월 28일 오전 10시 45분, 미나브

이란 호르모즈간주 샤자레 타예베 여자 초등학교. 수업 중이었고 약 170명이 있었다



학교 건물의 위성 영상 비교 · 약 15년 전 IRGC 해군기지가 폐쇄되었고, 2016년 무렵 학교는 별도 외벽과 출입구를 갖추

자료: JTBC 뉴스룸 (2026.3), BBC Verify / Guardian / Al Jazeera 위성영상 분석 인용

2013년과 2016년 위성영상 비교 · 학교와 해군기지 사이에 외벽이 생겼다

미국은 처음에 이란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109일이 지난 6월에야 실수라고 말했다.

이란 미나브 당국 발표 · FT · 타스(2026.3.1) · 위성영상 분석: BBC Verify, Guardian, Al Jazeera · JTBC 뉴스룸(2026.3)

AI 빅테크의 전쟁 운영체제와 평화운동 · 정보인권연구소 시민사회 활동가 연속강좌 2강

165

사망
(이후 집계 최소 175명)

96

부상

타격 수단 미국 토마호크 미사일

표적 데이터베이스는 이 건물을 군사 시설로 분류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곳

법무부 출입국 얼굴사진, 당사자 동의 없이 민간 인공지능 업체로 이전

1억 7,000만

전체 건수

1억 2,000만

외국인

5,760만

내국인

사업명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 — 본인 확인을 넘어, 여러 사람 속에서 특정인을 찾아내고 이상 행동을 감지

학습과 분류의 재료가 데이터다. 이 사진은 그 재료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박주민 의원실 확인 자료 · 법무부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 사업

오늘의 두 문장

첫째

시스템이 정확하게 작동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다

위험은 부정확함이 아니라, 정확함의 언어로 정치적 결정을 감추는 데 있다

둘째

우리가 마주한 것은 사건이 아니라 운영체제다

개별 무기의 자율성이 아니라, 전쟁을 수행하는 구조 자체가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지고 있다

완전 자율 시스템을 금지했어도 미나브의 학교는 타격됐을 것이다. 거기엔 사람이 있었다.

2017년 메이븐, 2018년 구글

알고리즘 전쟁 교차기능팀 — 그리고 기술 기업이 거절할 수 있었던 마지막 순간

2017년 4월 메이븐 출범

드론과 위성과 센서가 쏟아내는 영상이 사람이 볼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
군함·전차 등 400만 개 이상의 군사 물체를 담은 학습 데이터 구축.
첫 파트너는 구글이었다.

2018년 4월 구글 이탈

직원 3천 명 이상이 공개 서한에 서명.
최소 12명 퇴사. 구글은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기술 기업이 윤리를 이유로 국방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던 마지막 순간에 가깝다

8년이 지난 지금,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기는 훨씬 어려워졌다. 왜 어려워졌는가 — 슬라이드 15에서 답한다.

구글이 판 것과 팔란티어가 판 것

팔란티어는 구글의 대체자가 아니었다. 구조 자체를 바꿨다

구글 컴퓨터 비전

이 영상에 차량이 있는가.
건물이 있는가.

특정 대상을 알아보는 기능

팔란티어 온톨로지

드론 영상만이 아니라 위성·신호정보·통신 감청·공개출처정보를 하나의 구조로 묶는 체계

세계를 다시 짜는 형식

구글이 판 것은 기능이었고, 팔란티어가 판 것은 세계를 다시 짜는 형식이었다

메이븐의 현재 · 2025년 5월 사용자 2만 명 돌파 · 2026년 3월 최소 32개 회사가 개발 참여, 약 2만 5천 명의 미군이 사용
2026년 3월 시범 단계 없이 미군 전체의 합동 지휘통제 핵심 소프트웨어로 채택

국가 전략이 산업을 끌어들이다

빅테크가 돈을 좇아 들어간 것이 아니다. 국가의 전략이 이 과정을 설계했다

2014

제3차 상쇄 전략

사람과 기계가
한 팀을 이루는 방식

2025.1

AI 퍼스트 메모랜덤

펜타곤

2025.1

행정명령 14179호

규제보다 산업 육성

2025

Department of War

역지에서 전쟁 수행으로
기관 이름을 바꾸다

AI 군국주의

겉보기와 달리 기업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다. 국가가 민간 인공지능 산업 전체를 군사 생산 체계로 끌어들이는 과정이다.

김현준(2026), 「미국의 군사 AI 전략과 전쟁의 알고리즘화」 · 원 개념은 Nicholas Rabb

모든 합법적 사용

Any Lawful Use — 오늘 세 번 나오는 조항

“미 국방부는 모든 인공지능 조달 계약에
‘모든 합법적 사용’ 조항을 넣도록 지시했다”

무엇이 합법인지는 정부가 정한다.

그러니 기업이 어떤 금지선을 걸어도 실질적으로 군사적 사용을 거부할 수 없는 구조가 된다.

슬라이드 12

지금 — 조항의 도입

슬라이드 15

엔트로픽 사례 — 기업의 거부와 배제

슬라이드 58

국방AI법안 제18조 제3항 — 법률로 달성

클라우드: 보이지 않는 기반

같은 세 회사가 민간 시장과 국방 인프라를 동시에 쥔다

60%

전 세계 초대형 데이터센터 시장에서
아마존 · 마이크로소프트 · 구글의 점유율

- 2019** 국방부 제다이 계약 100억 달러 (2021 취소)
- 2022~** JWCC — MS·아마존·구글·오라클 모두 참여
- 2020** 중앙정보국 C2E 클라우드 계약
국가안보국 클라우드 계약 100억 달러

독과점과 군사화는 두 개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를 키우는 하나의 문제다

군대가 특정 클라우드 없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기업의 독점을 깨는 정책은 안보 위협으로 다시 분류된다

감시에서 감시로

이중용도라는 말이 포착하지 못하는 이동

넘버스 프로젝트 2021

구글·아마존과 이스라엘 정부, 12억 달러.
얼굴 탐지 · 자동 이미지 분류 · 물체 추적 · 감정 분석.

같은 기능이 그전에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서
국경 감시에 쓰이고 있었다.

안두릴 감시탑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이민자를 감시하며
이동 패턴 · 열화상 영상 · 레이더 신호를 추적.

그 데이터가 래티스 인공지능의 학습 자료가 되고,
국경에서 배운 알고리즘이 전장의 표적 식별에 쓰인다.

민간에서 군사로가 아니라, 감시에서 감시로. 대상만 바뀌고 기술은 그대로다

규제 전략에 직접 영향을 준다 — 군사적 사용만 규제 대상으로 삼으면 학습 단계가 규제 밖에 남는다

회사가 그은 선의 수명

기업이 스스로 그은 선은 시장 조건이 바뀌면 지워진다

구글

2018 AI 원칙 제정

개발하지 않을 네 분야 명시

2025 원칙 개정

무기·감시 관련 약속 삭제

팔란티어

2020 ICE 계약 거절

인권 침해 우려를 이유로

2025 같은 부서와 계약

ImmigrationOS 3천만 달러

엔트로픽

2026 두 금지선 제시

시민 대량 감시·완전 자율무기

2026.3 공급망 위험 지정

모든 군 계약자와 거래 금지

안전을 내세운 기업은 시장에서 밀려나고, 내세우지 않은 기업은 기밀망에 들어간다

같은 기간 xAI의 그룩이 국방부 기밀 네트워크 GenAI.mil에 통합되었다

설계하는 힘과 명령하는 힘

신군산복합체 — 국가 폭력의 민영화도, 국가에 의한 기업 도구화도 아니다

기업 — 설계하는 힘

알고리즘과 모델을 설계하는 힘으로
전쟁이 수행되는 방식 자체를 정한다

온톨로지 · 분류 기준 · 임계값

책임
공백

국가 — 명령하는 힘

예외상태를 선포하는 주권으로
전쟁의 시작과 끝을 정한다

교전 규칙 · 작전 승인 · 동원

국가: 알고리즘이 판단한 것이지 우리 명령이 아니다

기업: 우리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사용 결정이다

규제해야 할 것은 회사도 부처도 아니라 이 분업 구조 자체다

김현준(2026), 「AI 신군산복합체의 가설적 정의」

자율살상무기 정의와 그 그물

CCW 정부전문가그룹의 기준 —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다

“사람의 개입 없이 표적을 식별하고 선택하고 교전할 수 있는 시스템”

자포리자 드론

정의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그런데 실질적인 결정은
학습 단계에서 이미 끝나 있었다

미나브 작전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결과는 같은 방식으로 나왔다

가자의 표적 시스템

완전 자율이 아니다

사람이 마지막에 승인 버튼을 눌렀다
그것을 통제라고 부르기 어렵다

완전 자율도 아니고 의미 있는 인간 통제도 아닌 중간 지대. 지금 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 중간 지대다

AI 전쟁 운영체제

데이터 수집 · 모델링 · 분류 · 킬체인 가속을 하나로 묶는 소프트웨어 인프라

전쟁을 결정의 연쇄가 아니라 끊임없는 데이터 처리 과정으로 바꾸는 장치

이름의 내력

메이븐을 만든 사람들이 자기가 만드는 것을 이렇게 불렀다.
“전쟁을 위한 운영체제” “전쟁을 위한 윈도우”
— 자기 능력에 대한 자랑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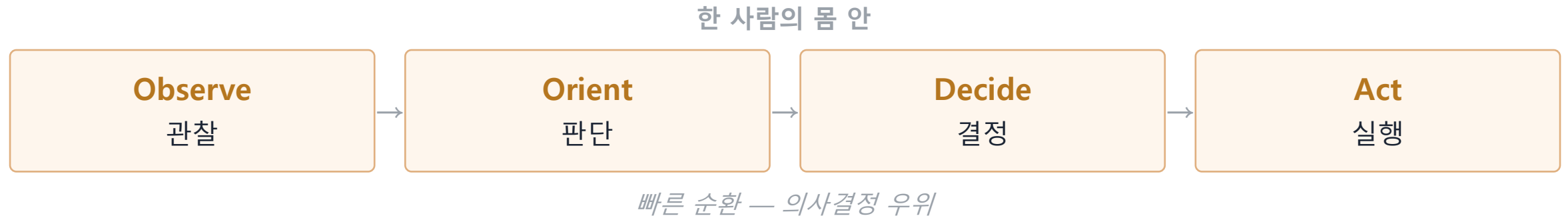
우리가 같은 이름을 쓰는 이유

평화월딩연구소 세미나팀, 2025년 12월 연구노트.
방향이 반대다.
— 규제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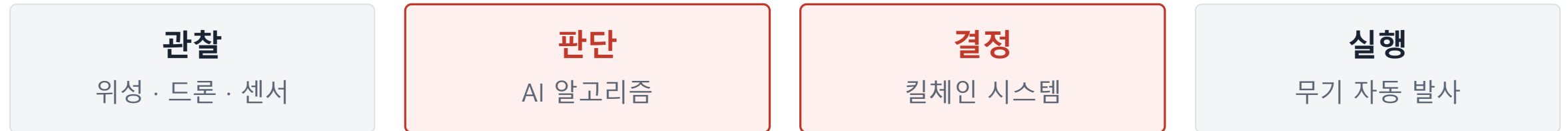
팔란티어 한 회사를 금지해도 똑같은 연결 구조를 가진 다른 플랫폼이 대신한다

OODA 순환

한 사람의 몸 안에 있던 순환이 몸 밖으로 흩어질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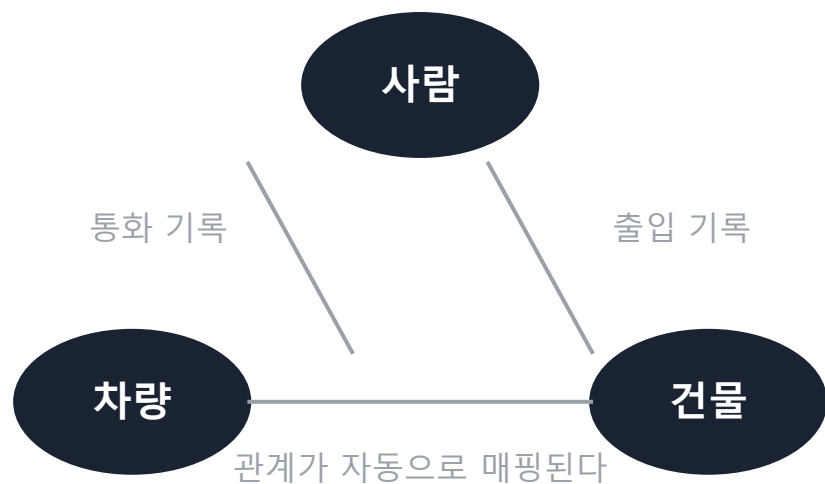
몸 밖으로 — 각 단계가 분리되어 시스템으로 흩어진다



지금 벌어지는 변화의 핵심은 판단과 결정, 이 두 단계가 기계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온톨로지: 사람이 객체가 된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객체와 관계로 다시 만드는 데이터 모델



회사의 설명

조직의 디지털 트윈.
지도나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현실이 바뀌면 실시간으로 반영
되고 그 위에서 판단과 개입이 이루어지는 운영 단위

이 단계에서 이루어진 것

관찰의 체계화이지 판단의 자동화가 아니다.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한 구조로 묶었을 뿐, 누가 적이고 누가
민간인인지 정하는 일은 여전히 사람의 몫이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첫 번째 정치적 결정이 이미 내려진다

구별 원칙이 임계값이 되는 순간

온톨로지가 어떤 데이터를 넣을지 정하는 순간, 이후 모든 판단의 범위가 정해진다

국제인도법의 구별 원칙



보호받아야 할 존재 / 공격 가능한 대상

온톨로지 위에서의 구별



몇 점 이상이면 표적, 몇 점 미만이면 아니다.
민간인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위험 점수가 낮은 객체가 된다

도구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를 어떤 형식으로 만드는가의 문제다

그리고 이 형식은 기술적으로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 누군가 그렇게 설계한 것이다

라벤더 — 두 개의 숫자

37,000

명

라벤더가 표적으로 분류한
팔레스타인인의 수

20

초

사람이 한 표적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데 걸린 시간

“나는 승인 도장 역할 외에 인간으로서 아무런 부가가치가 없었다”

— 라벤더 운용 정보장교 증언, +972 매거진 · 로컬 콜(2024.4)

사전 파라미터 하급 무장세력 1인당 민간인 15~20명을 “허용 가능한 부수적 피해”로 설정 · 이스라엘군은 보도의 핵심 내용을 부인

비인간화: 감정에서 점수로

적을 인간의 범주 바깥으로 밀어내는 작업이 수행되는 방식

역사적 파시즘 정동적 동원

선전 · 집회 · 행진 · 스펙터클

허버트 켈먼(1973)이 분석했듯
비인간화는 본래 감정의 작업이었다



오늘 알고리즘적 분류

점수 매기기 · 객체로 바꾸기 · 임계값 설정

라벤더가 사람을 1부터 100까지의
위험 점수로 바꾸는 것 자체가
비인간화의 새로운 형식이다

감정이 하던 일을 알고리즘이 한다

미나브의 학교가 군사 시설로 남아 있던 것 · 친팔레스타인 기고문이 하마스 지지 활동으로 규정된 것 · 2024년 12월 반국가세력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
서로 다른 사건이지만 같은 종류의 작업이다

언어모델과 통합

2024년 12월, 안두릴·팔란티어 컨소시엄 — 어느 하나도 단독으로는 운영체제가 아니다

센서	안두릴 래티스 메시 — 전술 센서 데이터 수집
표적 생성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 · 팔란티어 AIP
연산 기반	아마존 웹서비스 — 기밀 데이터 클라우드
질의 창구	엔트로픽 클로드 — 자연어 인터페이스
공통 기반	팔란티어 온톨로지 — 이 전부를 잇는다

접근이 쉬워진 만큼 책임은 흩어진다. 누구나 물을 수 있고 아무도 결과를 책임지지 않는다

킬체인에서 킬웹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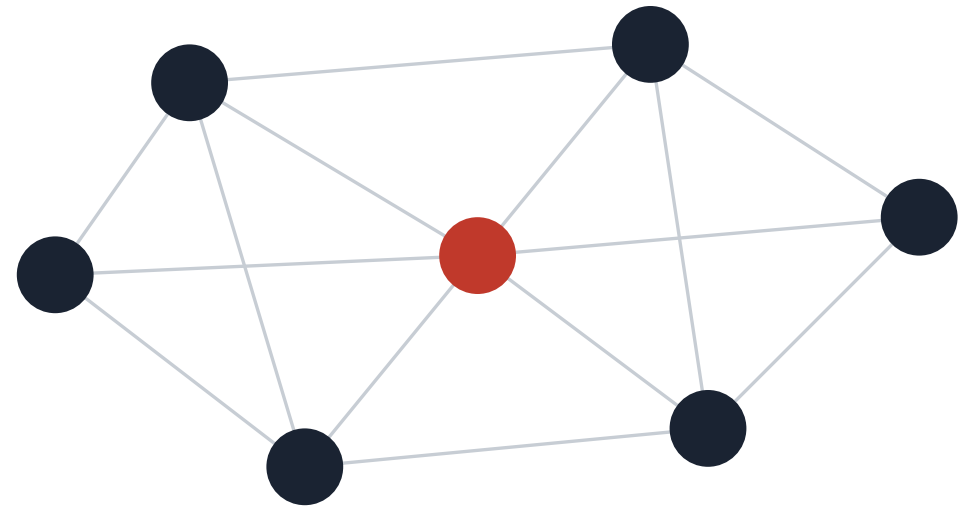
F2T2EA — 단일 킬체인의 사슬에서 다중 킬웹의 그물로

킬체인 6단계

1. 탐지 Find
2. 고정 Fix
3. 추적 Track
4. 표적화 Target
5. 교전 Engage
6. 평가 Assess

단계마다 별개의 사람이 운용하는 체계가 끼어들어
시간이 걸리고 판단이 지연된다

킬웹



모든 단계의 데이터를 전장의 모든 자산에 나눠 공유하고,
어느 자산이 무력화돼도 다른 자산이 이어받는다

사슬은 한 고리를 끊으면 끊어진다 — 그물은 그렇지 않다

분류기의 역설

사람의 통제를 되찾으려는 시도가 왜 실패하는가

의도

위험한 요청을 걸러내려고
별도의 분류 모델을 둔다

통제 장치를 넣는다

결과

분류기는 걸러내는 동시에
자동 승인의 범위를 정한다

안전하다고 분류된 작업은 사람 확인 없이 실행된다

통제 장치를 넣었기 때문에 통제가 필요한 범위가 오히려 줄어든다

라벤더의 20초 승인은 사람이 관여했다는 사실을 기록하는 장치이지 사람이 판단했다는 증거가 아니다

사람이 무엇을 근거로 얼마의 시간 동안 판단하는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사람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면책 장치가 된다

책임의 소멸과 블랙박스

각각은 다 사실이고, 그 사실들의 연쇄만 남는다



책임은 사슬의 어느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곳을 지나가면서 증발한다

블랙박스의 진짜 내용은 알고리즘이 불투명하다는 데 있지 않다
데이터에 들어 있는 역사적 편향이 알고리즘의 객관성으로 세탁되는 과정에 있다

설명가능성 —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는 문제. 인식의 문제

책무성 — 결과에 누가 누구에게 답하는지를 정하는 문제. 정치적 관계의 문제

AI 전쟁 운영체제의 표준화 궤적

가자에서 학습 → 우크라이나에서 시험 → 베네수엘라에서 실전 → 이란에서 표준화 → ?

가자

2023.10~

학습

라벤더 · 복음
아빠는 어디에

우크라이나

2022~

시험

팔란티어 +
메타콘스텔레이션

베네수엘라

2026.1

실전 투입

마도로 생포 작전
3분 전 인지

이란

2026.2

표준화

24시간 1,000개 표적
179개 데이터 원천

한반도

?

이 강의가
질문하는 것

핵무기
약 10년

표준화에 걸린 시간

드론
약 20년

AI 전쟁 운영체제
4년

가자 — 두 가지 학습

2023년 10월부터. 성격은 학습이다

하나 — 시스템이 배웠다

팔레스타인인의 통화 기록과 이동 패턴과 종교 활동이 수십 년간 쌓여 표적 시스템의 학습 데이터가 되었다.

2023년에 시작된 것이 아니다. 점령이 만들어낸 비대칭적인 데이터 수집 체제가 그 바탕이다.

다른 하나 — 산업이 배웠다

어느 수준의 자동화까지 정치적으로 감당이 되는지.

민간인 피해가 어느 정도까지 국제적 제재를 부르지 않는지.

실전에서 확인되었다.

데이터 수집의 비대칭이 폭력의 비대칭으로 바뀐 것이 가자에서 벌어진 일이다

우크라이나 — 실험실

기술을 적용하는 곳이 아니라 만들고 검증하고 학습 데이터를 쌓는 곳

“우크라이나가 우리의 실험실이 되었다” — 미 제18공수사단장

환류되는 것

표적 식별의 정확도 · 오탐지율 · 타격 결과.
실전에서 만들어진 데이터가 전부 학습 자산으로 되 돌아온다.

전장에서 검증된 킬체인이 전 세계로 수출될 다음 세대 무기의 원형
이 된다

표준화의 계기 2025.3

NATO 통신정보국이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 NATO 버전을 구매.

회원국 전체가 같은 운영체제를 쓴다는 것은 표적의 식별과 분류와
타격 기준이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통일된다는 뜻

우크라이나 병사와 민간인의 희생으로 배운 알고리즘이 서구 방산·기술 기업의 자산이 된다. 전장이 시장이기도 하다.

이 지적은 우크라이나 지원의 정당성 자체를 부정하는 논거가 아니다. 저항의 정당성과 그 저항이 산업적으로 이용되는 구조에 대한 비판은 다른 문제다.

2026년 여름, 두 사건

실험실에서 검증되는 것은 기술만이 아니다

7월 6일 자포리자

러시아 쪽 자율화가 어디까지 갔는지

안테나 없는 드론이 스스로 표적을 고르고, 민간인 3명이 사망

8월 24일 키이우

우크라이나 쪽 무인화가 어디까지 갔는지

국가 공식 기념 행사에서 병사 대신 기계가 행진

우크라이나도 크림반도를 비롯한 점령지에서 완전 자율형 시스템을 시험했다고 당시 국방장관이 밝힌 바 있다. 양쪽이 같은 방향으로 함께 움직였다.

자율화를 정치적으로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가도 함께 검증된다

민간인이 죽었는데 자율 시스템 운용이 멈추지 않았고, 7주 뒤 무인 전력이 국가의 자랑으로 행진했다

베네수엘라 — 3분

2026년 1월 3일 새벽, 카라카스

3분

마두로 대통령이 작전을 인지하지 못한 시간

속도

OODA 순환으로 옮기면 관찰과 판단과 결정이 사실상 동시에 끝나고
실행만 남은 상태로 작전이 시작되었다는 뜻

적용 범위

전장 지원 시스템을 넘어, 주권국가의 원수를 자기 나라 영토에서 체
포해 옮기는 작전에까지 투입될 수준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작전에서 엔트로픽의 클로드가 팔란티어와의 협력을 통해 쓰였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가 엔트로픽과 국방부의
충돌을 불렀다.

이란 — 표준화, 그리고 4년

2026년 2월 28일. 핵심 기반은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이었다

1,000

첫 24시간 우선순위 표적

179

통합된 데이터 원천

20 → 2,000

스무 명이 이천 명 몫을 처리

그리고 같은 날, 미나브의 학교가 타격되었다

규범 형성이 따라갈 수 없는 속도		
핵무기	약 10년	그 사이 부분핵실험금지조약·핵확산금지조약 협상
무장 드론	약 20년	그 사이 표적살해의 국제법적 검토가 축적
AI 전쟁 운영체제	4년	국제 협상이 한 바퀴 돌기에도 부족한 시간

이식 가능성

네 전장을 관통하는 것은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형식의 이전

하나의 분류 형식

가자

2023

우크라이나

2022~

베네수엘라

2026.1

이란

2026.2

옮겨진 것은 소프트웨어고, 지워진 것은 각 장소의 특수성이다

가자의 팔레스타인인과 이란의 학생과 카라카스의 대통령. 운영체제에게는 다 객체이고 관계이고 점수다

ImmigrationOS

2025년 4월, 미국 이민세관집행국이 팔란티어에 약 3천만 달러 규모 계약

전쟁을 위한 운영체제

메이븐을 만든 사람들이
자기 시스템을 부른 이름

이민 생애주기 운영체제

팔란티어가 이민 집행 시스템에
붙인 이름

같은 회사가 같은 어휘로 두 영역의 인프라를 규정한다

팔란티어가 국제앰네스티 회신(2025.7.24)에서 스스로 명시한 세 기능

- ① **집행작전의 우선순위화와 표적화**
- ② **자진추방 추적**
- ③ **이민 생애주기 운영**

우선순위화와 표적화 — 군사 용어다. 회사가 스스로 자기 제품의 이민 행정 기능을 표적화라고 규정했다

SAM.gov 조달 문서 · 404 Media(2025.4.17) · Palantir, Response to Amnesty International(2025.7.24)

감시 인프라의 결합

ImmigrationOS 혼자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Babel X

바벨스트리트 · 2019~

이름·이메일·전화번호 하나에서 시작해
소셜미디어 게시물, IP 주소, 고용 이력,
광고 식별자까지 접근.
관세국경보호청 문서에 따르면 특별히 난
민과 비호신청자 감시 임무

지속 검색

persistent search

처음 검색 이후에도 그 사람에 관해 새로
나타나는 정보를 계속 감시.
감시가 사건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상태
가 된다

ELITE · RCA

팔란티어 · ICE

여러 정보를 대조해 실시간 이동 경로와
위치 예측을 지도에 표시.
현장 요원들 사이에서 추방 대상자용 구
글 맵으로 통한다

아까 본 온톨로지가 전장에서 하는 일과 똑같다. 사람이 객체가 되고 관계가 연결되고 그 위에 점수가 매겨진다

연료를 대는 것은 데이터 브로커 산업이다 — 렉시스넥시스(은행·통신 기록), 클리어뷰 AI(무단 수집한 얼굴 이미지).
영장 제도를 피해 민간 시장에서 데이터를 사고 불투명한 알고리즘 판정으로 공권력을 행사한다

표적이 된 사람들

이 인프라가 실제로 누구를 향했는가

마무드 칼릴 2025.3.8

컬럼비아대 대학원생, 영주권자. 캠퍼스 시위에서 대변인 역할.

대통령은 “앞으로 있을 많은 체포 중 첫 번째”라고 선언했다.
6월 20일 연방법원 명령으로 석방.

뤼메이사 외즈튀르크

터프츠대 튀르키예인 박사과정생. 집 근처에서 사복 요원 여섯 명에게 붙잡혀 번호판 없는 차에 실려 갔다.

확인되는 유일한 행위는 가자에 관한 의견 기고문을 함께 쓴 것이다.

2025년 3월 이후 취소된 학생 비자 최소 1,800명 ~ 최대 4,000명 · 다수는 시위에 참여한 적도, 취소 통지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소송에 따르면 학생들은 아프리카·아랍·아시아·중동·무슬림 배경 출신이라는 이유로 표적이 되었다

정치적 표현이 위협 범주로 코드화되었다 — 데이터에 들어 있던 정치적 편향이 알고리즘의 객관성으로 세탁되는 과정

팔란티어의 5년

기업 자율규제가 시장 조건의 함수라는 가장 명료한 반증

2020

“국경에서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 우려, 그리고 미국 안에서의 불비례적 이민 집행 위험에 대한 귀 단체의 우려를 공유하기 때문에, 현 행정부 아래서 이민세관집행국 및 관세국경보호청과의 계약을 의도적으로 거절했다”

2025

같은 회사가 같은 부서와 계약했다.

ImmigrationOS · 약 3천만 달러

인권 위험의 실질은 오히려 커졌다.
바뀐 것은 시장 조건과 정치 환경이다.

구글 2018 이탈 → 2025 원칙 개정 · 팔란티어 2020 거절 → 2025 계약
두 사례 모두에서 기업의 윤리적 판단은 외부 조건에 따라 움직였다

전쟁 운영체제의 사회화

세 영역을 관통하는 것은 같은 작동 원리 — 분류하고 예측하고 자동으로 응답한다

가자

제노사이드 분류체계

→ 책임이 설계로 옮겨간다

이란·베네수엘라

국가 간 전쟁

→ 폭력이 절차로 객관화된다

이민세관집행국

국내 행정 제도화

→ 정치적 결단이 자동화로 우회된다

전쟁 영역의 인프라가 사회 전체의 표준 절차가 되는 과정,
그 결과 전시와 평시의 구분이 통치 기술 수준에서 무의미해지는 사태

그런데 방향이 한쪽만이 아니다

유뱅크스 — 자동화된 복지 행정의 폭력, 디지털 빈민구호소 · 브라운 — 흑인성에 대한 감시의 계보 · 벤저민 — 새로운 짐 크로 코드
세 연구가 이민세관집행국의 알고리즘 표적화에서 만난다. 전쟁 기술이 행정으로 내려온 것만이 아니라, 이미 행정에 있던 분류 권력이 전쟁 기술과 결합한 것이기도 하다.

정동과 알고리즘의 순환

감정이 사라지고 알고리즘이 대신했다는 뜻이 아니다

콘텐츠 → 정동

극우 감정 알고리즘이 원한과 공포와 적대를 골라 증폭

정동 → 정책

움직인 감정이 정치적 압력이 되어 표적 처리의 허용치를 떠받친다

정책 → 표적화

데이터 통합과 표적화 인프라 확장을 정당화

표적화 → 콘텐츠

작전 결과가 다시 볼거리로 돌아 적대를 재생산

표적 처리의 임계값으로 굳는 순간 감정이 사라진다

그리고 바로 그 사라짐이, 비인간화를 중립적 분류로 세탁하는 기능을 한다

가자 — 이스라엘 사회의 적대가 부수 피해 허용치를 · 이란 — 미국 내 여론이 작전 허용치를 · ICE — 이주민에 대한 원한이 위험 점수의 표적화를 떠받쳤다

한반도 — 이중 문턱

한국은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갖고 있다

바깥 문턱

밖을 향한 무력 사용에서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는 선

국방혁신 4.0 · 국방AI법안
K-팔란티어 · K-메이븐

안쪽 문턱

안의 시민을 다시
분류하기 시작하는 선

1950년 이래 76년
형태를 바꿔 온 분류 권력

별개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같은 기술 위에 있다

*먼저 분명히 해 둘 것 — 한국에서 제노사이드적 폭력이 진행 중이라는 주장이 아니다.
말하는 것은 발생이 아니라 조건이다. 문턱을 넘었다는 것이 아니라 문턱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법안이 나온 자리

인공지능기본법 제4조 제2항이 만든 공백

“이 법은 국방 또는 국가안보 목적으로만 개발·이용되는 인공지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방인공지능법안 의안번호 16355

2026년 1월 27일 발의 · 유용원·부승찬 의원 대표발의 · 33인 공동발의
본칙 30개 조문, 부칙 2개 조문

세계 최초라는 사실

미국 — 국방부 지령이라는 행정부 내부 규범
유럽연합 — 인공지능법에서 군사 분야 적용 제외
영국 — 정책문서 수준

통과되면 세계 최초의 군사 인공지능 법률

문제는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다. 법률의 겉모습을 갖추면서 핵심 결정을 행정부에 통째로 넘긴다면, 그건 의회 통제의 외양만 남기고 실질은 비우는 장치가 된다.

채용 AI와 표적 AI

인공지능기본법이 민간 고영향 AI에 부과하는 안전장치를, 국방AI법안이 대신하고 있는가

채용 · 대출 심사 AI

인공지능기본법 고영향 AI

- 위험관리
- 설명 의무
- 사람의 관리·감독
- 문서 보관
- 영향평가

표적 선택 AI

국방인공지능법안

- × 위험관리
- × 설명 의무
- × 사람의 관리·감독
- × 문서 보관
- × 영향평가

사람을 뽑는 인공지능에는 붙는 안전장치가 사람을 죽이는 인공지능에는 안 붙는다

세 곳이 비어 있다

국방인공지능법안 조문 분석

① 정의 조항

제2조

자율무기체계 개념이 없다.

자율성 수준을 나누는 분류 체계가 없고,
표적화 인공지능이라는 범주가 없다.

범주가 없으면 강화된 통제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아예 생기지 않는다

② 인적 개입 조항

제3조 제3항

법안에서 인간 통제를 명시한 유일한 조항.

그런데 OODA 순환의 결정 단계,
마지막 승인 버튼에만 있다.

실질적인 결정은 관찰과 판단 단계에서
이미 끝난다

③ 데이터 관리

제16조

“양질의 학습데이터” — 내용이 없는 표현.

편향 감사 의무도,
데이터 출처를 추적할 의무도,
민간 데이터를 군사용으로 쓰지 못하게
하는
제한도 없다

모순이 하나 더 — 제14조 획득 특례와 제18조 규제특례가 안전 규제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게 한다.
인적 개입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그 보장을 검증하는 절차를 우회할 수 있게 해 놓았다.

국회와 부처는 무엇을 말했나

제도 안에서 이미 통과 판정을 받았다

국회 국방위원회 검토보고서

인적 개입 조항을 “적절한 규율 방안”으로 평가.
방금 문제를 지적한 그 조항이 이미 통과 판정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AI 학습데이터 관리에서 과기정통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넣자는 의견.
데이터 관리에 공백이 있다는 걸 정부 스스로 인정한 셈

방위사업청 의견

“국방인공지능 학습데이터를 무기체계 기술개발을 하는 기업과 연구기관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추가할 필요”

시민사회가 민간 데이터의 군사적 전용을 막자는 요구를 내는 시점에,
정부 부처는 반대 방향으로 데이터를 더 열자고 요구하고 있다

민간 AI가 국방으로 들어가는 다섯 가지 길

어느 기업이 들어갔느냐가 아니라, 연결이 어느 길로 이루어지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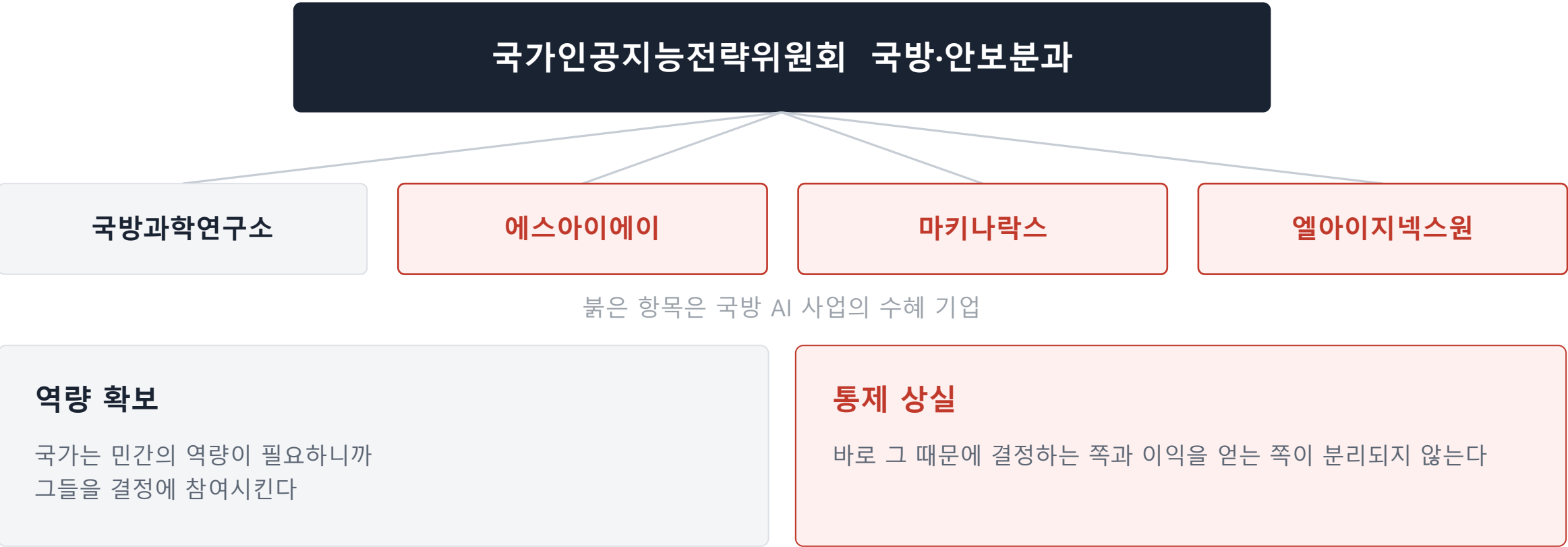
직접 조달	코난테크놀로지	국방부와 각 군에 직접 납품
하도급	솔트룩스	한화시스템 등 체계종합업체의 하위 계약자
정부 R&D + 하도급	마키나락스	방위사업청·국방기술진흥연구소 과제 직수주
인프라 · 협력	네이버클라우드	클라우드 제공, 업무협약과 전담 조직
소유구조로 내재	에스아이에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위성 계열사 세트렉아이 소속

여기에 정책이 봉합의 기능을 한다 — 산업정책이 국방에 연결되고, K-팔란티어·K-메이븐 구상과 국방AI법안으로 운영체제와 법령까지 국가 기획의 대상이 된다

김선우(2026), 「민간 AI 기술은 어떻게 국방으로 진입하는가」

결정과 수혜가 분리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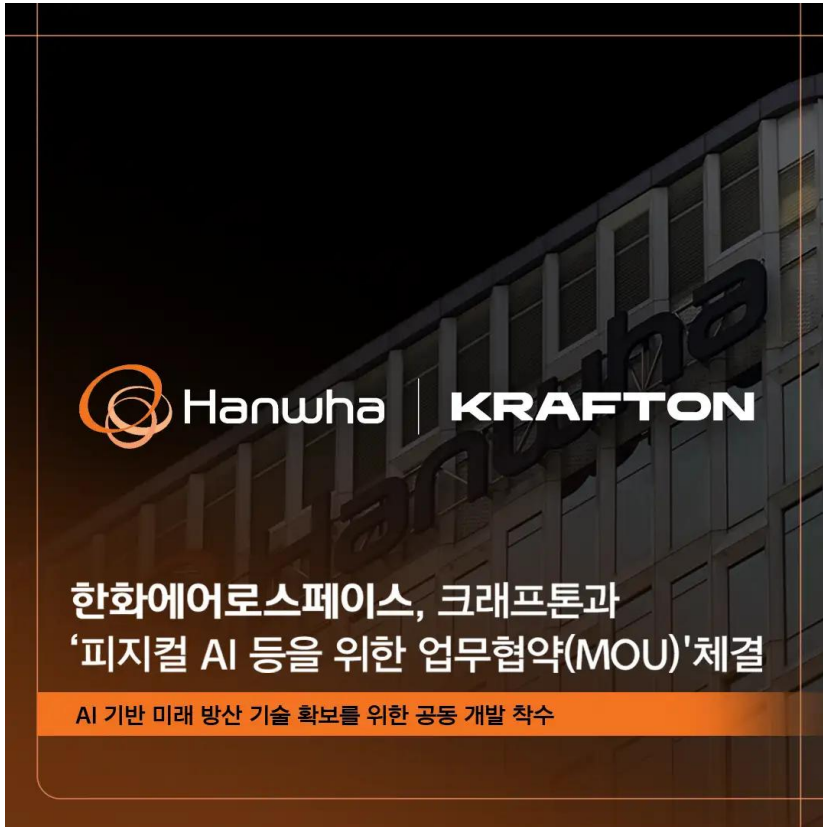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국방·안보분과, 2025년 9월 출범



연결이 자본과 협력과 정책 여러 층으로 흩어질수록, 통제와 책임의 소재도 함께 흩어져 어느 한 곳에도 붙지 않는다

크라프트톤과 한화, 그리고 안두릴

2026년 3월 13일 업무협약 — 게임 데이터의 방산 전용이 공식 선언되었다



체결된 것

업무협약(MOU). 합작법인은 아직 설립되지 않았다.
의무공시 대상이 아니어서 출자 비율은 정식 계약 때 공시된다

결합되는 것

크라프트톤의 데이터 운영 경험과 가상환경 시뮬레이션 기술
+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방산·제조 인프라와 무인 체계 기술

펀드 참여

한화자산운용 조성, AI·로보틱스·방위산업 집중 투자, 목표 10억 달러

“안두릴과 같은 글로벌 방산 기술 기업으로 키우겠다”

— 김창한 크라프트톤 대표

크라프트톤·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보도자료(2026.3.13)

협상장에서의 한국

CCW 정부전문가그룹 — 규제의 그물을 성기게 만드는 네 가지 입장

① “치명적(lethal)” 용어 유지

상해나 불구 같은 비치명적 피해가 규제 밖으로 나간다

② “식별(identify)” 기능을 정의에 포함

미리 표적 프로파일만 받고 자율 작동하는 시스템 다수가 규제 밖으로. 자포리자의 드론이 정확히 여기 해당한다

③ 일본식 좁은 접근 지지

어떤 상황에서도 IHL을 지킬 수 없는 시스템만 규제 — 사실상 면제

④ 시험·연구용 소규모 생산 제외

개발 단계의 책임 공백을 허용하는 선례

유엔총회 결의 2025.12.1

156개국 찬성 · 5개국 반대(미국·이스라엘·벨라루스·러시아·북한)
한국은 찬성한다면서도 공동성명에는 불참

국방AI법안은 한국의 협상 입장이 국내법으로 표현된 것이다

피스모모 분석(2026) · 백범석, 「디지털 군사 신기술과 인권」(2026.2)

분류 권력의 76년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는 것이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다

1950

국민보도연맹

좌익 전향자 A·B·C 등급.
전쟁 직후 명부가 집행되어
대규모 민간인 학살

1980

연좌제 헌법 금지

제8차 개헌 헌법 제13조 제3항
자기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
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2010년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약 9,500명 명단 작성, 지원 배
제
김기춘·조윤선 유죄 확정(2020)
기무사 민간인 사찰

2024.12.3

반국가세력

계엄 선포와 함께 등장한 규정
노상원 수첩에서
처리 대상 명단 발견

변형의 세 방향 · 공식 제도 밖에서 필요할 때 작동하는 비공식화 · 좌익 · 좌파 성향 · 반국가세력, 어휘는 달라도 기능은 같은 이름 붙이기
· 종이 명부에서 데이터 통합 플랫폼으로

**학살이 명부 없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 명부에 따라 일어났다.
분류가 먼저 있었고 살상이 뒤따랐다. 그 분류는 평시의 행정 절차로 이루어졌다.**

두 문턱이 만나는 곳 — 데이터

가자의 라벤더는 밖의 적을, 1950년 보도연맹은 안의 시민을 분류했다

바깥 — 라벤더

같은 데이터 구조 · 같은 점수화

안쪽 — 보도연맹

① 목적 외 이용

출입국 심사를 위해 모은 생체정보가
본인도 모르게 학습 데이터가 되었다

② 이중용도

넘버스에서 이스라엘 군에 제공된 기능이
그전에 미국 국경 감시에 쓰이던 것이다.
한번 배운 알고리즘은 대상을 가리지 않
는다

③ 분류 권력

외국인 1억 2천만 건과 내국인 5,760만
건이라는
구분 자체가 이미 분류다

데이터의 흐름은 민간에서 국가로, 국가에서 민간으로, 민간에서 국방으로 양쪽으로 열리고 있다

그 흐름에 선을 긋는 법적 장치는 아직 없다

소버린 AI의 역설

기술 주권의 언어가 종속의 경로를 정당화할 때

한국이 만드는 것

선체와 기체

무기의 물리적 부분을 국산화한다

팔란티어와 안두릴이 쥐는 것

두뇌

그것을 운용하는 운영체제를 수입한다

규제해야 할 단위가 연결 구조라면, 연결 구조를 진 쪽이 실질적 권한을 갖는다. 3강 진입은 곧 종속의 심화가 된다.

가속에 관한 질문

동참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다.
가속의 방향을 누가 정하는가다

안보에 관한 질문

안보는 누구의 안보인가.
안보가 헌법 가치의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발언권은 어떻게 배분되는가

막막함은 역량 부족이 아니라 이 운영체제가 작동하는 방식이 만들어낸 결과다

안보의 언어

국가 존립이 걸렸으니 절차는 걸림돌이다

산업의 언어

빨리 가지 않으면 뒤처진다

따져 묻는 순간 묻는 사람이 안보를 모르거나 위기를 모르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이 두 언어로 환원되지 않는 것들 — 시민권 · 인권 · 인도주의 — 은 어디에 놓이는가

분류당하는 쪽의 밀려남

미나브의 학생 · 자포리자의 학생 · 기고문 한 편 때문에 연행된 박사과정생.
분류의 대상이 되어 발언할 자격 자체를 잃는다

개입하려는 쪽의 밀려남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발언은 할 수 있는데 그 발언이 진지하게 취급되지 않는다

두 밀려남은 같지 않다. 그런데 같은 구조에서 나온다. 그래서 두 일은 분리되지 않는다.

진단 — 테크노파시즘

전쟁의 논리가 사회 전체의 작동 원리로 바뀌면서 민주적 숙의가 껌데기만 남는 통치 방식

책임은 설계로 옮겨간다

폭력은 행정 절차로 객관화된다

정치적 결단은 자동화로 우회된다

주장하지 않는 것 —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 파시즘 체제라는 규정이 아니다.
대중정당·카리스마적 지도자·준군사조직이라는 고전적 지표로 보면 그 규정은 성립하지 않는다.
말하는 것은 체제의 완성이 아니라 조건의 형성이다.

왜 이름을 붙이는가 — 개별 무기 규제로도, 개별 기업 규제로도, 개별 사안에 대한 개별 대응으로도 부족하다는 판단이 이 진단에서 나온다

평화월딩과 두 가지 설계

설계를 거부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평화월딩 — 평화를 선언에서 설계로 옮기자는 제안. 평화를 원한다는 당위가 아니라 평화가 작동하게 만드는 장치를 묻는다

장소를 지우는 설계

한 번 만들어서 어디에나 그대로 옮긴다.

가자에서 만든 분류 형식이
이란에서 그대로 작동한다.

표준화가 그 힘이다

장소에서 시작하는 설계

여기의 역사와 조건에서
무엇을 멈춰야 하는지를 정한다.

한 번 정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힘에 휘둘리지 않도록 계속 다시 정한다

시민사회가 국방AI법안에 요구하는 것이 정확히 이 두 번째다

산업 진흥과 안보의 시각에서 만들어진 설계를 비판하면서, 각자 하는 일에서 다른 설계를 만드는 것

국제인도법만으로 부족한 세 가지

구별 원칙 · 비례성 원칙 · 예방 조치 의무는 필요한 뼈대다. 그런데

① 평시가 규율되지 않는다

국제인도법은 무력분쟁에 적용된다.
그런데 실질적인 결정은 관찰과 판단 단계에서 끝나고,
그 단계는 대부분 평시에 이루어진다.

자포리자의 드론이 이걸 증명한다.
프로판 탱크를 표적으로 학습시킨 시점과 장소는
전장이 아니었다

② 자국 시민이 규율되지 않는다

안쪽 문턱, 분류 권력의 재활성화는
국제인도법의 관할이 아니다.

미국 이민세관집행국 사례도 마찬가지다

③ 기업이 규율되지 않는다

국제인도법의 수범자는 원칙적으로
국가와 분쟁 당사자다.

신군산복합체 구조에서
설계하는 힘을 쥔 기업을 규율할 언어가
없다

이 세 공백을 메우는 것이 국제인권법이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 무력분쟁 중이 아니다.

A/HRC/60/63에서 가져올 네 가지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2025년 7월. 백범석 교수가 작성을 이끈 문서

“국제인권법은 평시와 무력분쟁 중 모두에 적용된다. 일부 인권은 무력분쟁 중에도 정지될 수 없으며, 여기에 생명권이 포함된다”

① 설계 단계부터 적용

인권 규범은 설계와 개발과 배치 전 과정에 적용된다.
배치 이후가 아니다

② 비차별 원칙의 직접 적용

알고리즘이 제대로 설계되고 감시되지 않으면 주변화된 집단에 대한 편향을 강화할 수 있다.
편향은 완성도의 문제가 아니라 차별의 문제

③ 실효적 구제 제공 의무

책임 주체를 특정할 수 없다는 사정이
국가의 구제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④ 기업이 수범자에 포함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 따라
방산 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인권 실사 의무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 제36조 — 아직 배치 전이라는 말은 면죄부가 아니라 심사의 사유다

세 개의 문턱

무엇이 입력이 되는가 · 무엇이 자동으로 결정되는가 ·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는가

입력

데이터 시민권 + 데이터 주권

민간 데이터 전용 금지 조항 신설
편향 감사 · 출처 추적 의무
방위사업청 데이터 개방 요구에 반대
인권위 조사와 의견 표명 요구
데이터센터 정보공개 요구

결정

분류기 가시화 + 중단권

독립 기관의 정기적 편향 감사
분류 기준 공개
이의 제기 절차 · 자동 정지 안전장치
외부 감사 발동 조건
로그 보존과 사후 감사 가능성

속도

속도의 시간 확보

규제특례 면제 불가 항목 명시
획득 특례 적용 대상 제한
특례에 일몰 조항
제36조 검토의 법률 제도화
협상 입장 공개 요구

로그가 없는 시스템에서는 책임이 사라진다. 기록이 없으면 물을 수도 없다.

세 문턱에 걸치는 두 과제

어디에도 혼자 속하지 않으면서 셋 다에 걸친다

① 기업에 대한 인권 실사 요구

요구의 형식을 자율에서 실사 의무로 바꾼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 야기 · 기여 · 직접 연결.
중요한 건 실사를 얼마나 했느냐가 아니라 인권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다.

국제앰네스티의 팔란티어 서한 교환이 이 규범을 작동시킨 사례다. 단체가 묻고, 기업이 답하고, 답변이 공개되고, 그 답변이 다시 평가 기준이 된다.

② 노동자의 조건

2018년 구글이 메이븐에서 나온 건 직원들의 압력 때문이었다. 그 이탈이 팔란티어의 진입을 불렀지만, 동시에 이 문제를 공적 논쟁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한국에는 아직 이 기록이 없다.
무관심이 아니라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과제는 거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가 가능한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크라프트온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인권 실사 수행 여부를 물어본 단체가 있습니까

숙의적 기술 거버넌스, 그리고 12월 3일

지금의 거버넌스에는 속도는 있는데 숙의가 없다

결정 구조의 다원화

인권·국제인도법 전문가와 시민사회 대표를 포함하고
방위산업 관련 기관 소속자와 용역 수령자의 위촉을 제한

검증 기구의 독립

안전연구소를 국방부·방위사업청에서 분리하고
소장 임명에 국회 동의를 요건으로

숙의 절차의 제도화

기본계획 수립과 특례 적용에 공청회 의무화,
협상 입장 공개, 정기적 국회 보고

2024년 12월 3일이 증명한 두 가지

하나 — 그 명부가 여전히 작성될 수 있다.
반국가세력이라는 규정이 나왔고 노상원의 수첩에 처리 대상이 적혔다

다른 하나 — 그것이 집행되지 않았다.
국회의 의결과 시민의 저항과 군의 불복종이 집행을 막았다

**명부가 집행되지 않은 건 누군가 그 문턱 앞에서 멈춰 섰기 때문이고,
멈춰 선 그곳에서 다른 세계가 한 뼘 지어졌기 때문이다**

정밀이라는 말의 두 시기

1970년대 리영희가 해체한 것과, 지금 해체해야 할 것

리영희는 “정밀 폭격”이라는 공식 언어를 뜯어서 그 아래에 있는 민간인 학살을 드러냈다

① 말을 만드는 주체

사람 → 기계

179개 데이터 원천을 묶어 24시간에 천 개의 표적을 내놓는 시스템이 각 표적에 신뢰도 점수를 붙인다.

해체해야 할 것은 사람이 만든 수사가 아니라 시스템이 내놓은 수치다

② 속도

검증 능력의 초과

표적 하나당 20초의 승인.
몇 시간에서 몇 분으로 줄어든 타격 시간.
4년 만의 표준화.

검증할 시간이 없다는 조건 자체가 검증을 면제하는 논리가 된다

③ 전시 방식

언어 → 언어와 이미지

지난주 키이우의 무인 열병식은 사람 없이 작동하는 전쟁을 국가의 자랑으로 행진시켰다.

그런데 행진한 건 하드웨어였다.
무엇을 표적으로 삼을지 정하는 소프트웨어는 그 대열에 없었다

정확한 언어가 현실을 가릴 때,
드러내야 할 건 부정확함이 아니라 정확함의 기만이다

사람을 죽이는 세계가 설계된 것이라면
사람을 살리는 세계도 설계할 수 있다

*다만 그 설계는 저쪽과 같은 방식일 수 없다.
저쪽은 한 번 만들어 어디에나 옮기는 방식이었고, 우리 쪽은 이곳에서 매번 다시 하는 방식이다.*

평화월딩연구소

Institute for Peace Worliding Studies